

조합장 선거에 주민안전 뒷전... 주객전도된 아파트 총회

개포주공단지 재건축 파일

① 코로나 사태에도 야외총회 강행

2015년 메르스 당시 한차례 홍역 단지 내 마땅한 총회 공간도 없어 “하루 속히 전자투표제 도입해야”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 이파크) 조합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야외총회 강행, 비용 부담 ↑

7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합은 오는 17일 착공 이후 추가분담금과 사업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합장 선출 총회를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5100여명에 이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0명의 조합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지어지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파크 투시도

/현대건설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달했을때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용지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는 현장참여로 진행됐다.

/뉴시스

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었다가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자가격리된 바 있다. 당초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고려해 전자투표제가 안건으로 제시됐지만 일부 조합원의 주도에 의해 야외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강행키로 했다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관계자 A씨는 “전자투표제를 하게 되면 비용이 1억원 가량 드는 반면 야외에서 총회를 진행하면 9억원 가량이 든다”라며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단지 내에서 야외총회를 진행할

만한 공간도 딱히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보요원 투입, 특정 후보 지지

그는 이어 “전자투표제를 실행하면 조합장 선출도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라며 “홍보요원(OS)이 호별로 방문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야외총회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 방향을 이끌고 있다”라고 전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초대 조합장과 전임 조합장 2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조합이 옳은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이어 “총회 홍보비용으로 OS

요원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전하며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상태에서 야외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촉발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013년 10월 조합 설립이후에 2016년 4월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7년 8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의 공동 시공자로 계약을 하고, 2020

년 5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같은 해 6월 공사착공을 시작해 지하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단지명은 디에이치아파크로 사업비 1조8798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4층~지상 35층, 6702세대 규모의 강남 최대 단지다. 오는 2023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관계자는 “재건축 일선 조합에서의 신속한 전자투표제의 반영과 건설 전문가의 참여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면서도 빠른 입주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장의 여론”이라고 전했다.

/정연우기자 yw964@metroseoul.co.kr

과기부, 마이데이터 8개 실증 과제 선정

개인데이터 한 눈에... 체감형 서비스 확대

암위험 측정 등 의료 과제 최다선정 온라인 통해 전입신고·확정일자 발급

‘마이데이터’ 과제를 통해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 통합 의료 데이터를 의료진 등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신의 진료·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암 위험도를 예측하는 서비스 개발도 시작된다. 또 여러 행정 서류를 모아 온라인 이사행정을 구현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공·금융·교통·생활소비 등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교통 등 개인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응급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 서비스 등 총 9개 분야 17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전 영역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실증 과제는 금융, 의료, 공공 등 분야에서 확대 개방되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해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눈에 모아보고 일상 생활에서 편익을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실증서비스 과제 공모가 진행됐으며, 총 200여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28개 컨소시엄 신청을 받아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순차적으로 개방되는 공공건강·병원의료·개인건강 데

<2021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제 목록>

/과기부

분야	과제명
의료(3건)	만성공발병의 전국망 마이헬스데이터, ‘마이헬스링크’ 플랫폼 통한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공공(2건)	MILIPASS 행복한 육군가족을 위한 나의 현역정보 활용지원서비스, ‘이사온’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생활·소비	스마트 생활 소비를 위한 컨슈머 비서 서비스
금융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소득통합정리 및 대안신용평가
교통	마이데이터 기반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이터를 활용해 국민 편익을 증진·확대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에비드넷은 경희의료원, 아주대병원 등 주요 병원, 한양대 산학협력단 등 20여개 기관과 공동으로 중·대형병원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해 ‘마이헬스링크’ 플랫폼을 구축, 개인 통합 의료데이터를 활용기관 등 제3자에게 공개를 추진한다.

또 최근 출시된 ‘나의 건강관리 앱’을 통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체·임상정보, 라이프로그 기반 암위험도 예측 서비스와 인제대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공발병 집중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 분야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된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 제공을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 서울특별시는 이사

및 전·출입에 필요한 공공마이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 및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여러 행정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한은행 등과 연계를 통해 전세대출 서비스 역시 비대면으로 제공해 국민의 이사행정 및 대출 심사 편의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비씨카드 등과 공동으로 통신사 및 카드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과 가격 변화 추이 분석은 물론 포인트 등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신한카드는 코리아크레딧뷰 등과 함께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의 흩어진 소득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신용점수 향상,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마크비전 고객사 위조상품 제거규모 1.7조 돌파

60개 이커머스 사이트서 위조 적발 동남아 6개국 적발 비중 67.6%

MARQVISION

인공지능(AI) 기업 마크비전이 자사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제거된 고객사들의 위조상품 제거 누적 규모가 1조 7300억원(15억 5546만 달러)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내에 정식 론칭한 마크비전은 현재 23개국 60여개에 달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위조상품 적발 및 삭제 신고를 자동화해주는 AI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품 ▲패션 ▲식품 ▲콘텐츠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AI 모니터링 플랫폼의 범위와 채널이 확장되면서 적발 및 제거되는 위조상품들의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마크비전의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처리된 위조상품은 클라이언트 한 기업당 월 평균 440억원(3937만 달러) 수준이었다.

마크비전 플랫폼을 통해 제거된 위조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한 결과, 의류(29.7%), 잡화(15.4%), 가방(13.8%), 액세서리(9.0%) 순으로 확인돼, 패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중국(19.96%)이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16.2%), 말레이시아(15.5%), 싱가포르(10.7%), 필리핀(10.1%), 베트남(7.8%), 태국(7.3%), 대만(5.7%), 대한민국(3.7%)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6개국 비중의 합은

67.6%에 달해, 마크비전을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유통된 것으로 분석됐다.

마크비전의 판매자 분석 시스템 ‘셀러맵핑(Seller Mapping)’을 통해 위조상품 셀러들 사이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수의 판매자들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가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크비전에서 신고 처리한 위조상품 전체 건수의 약 50%가 이들이 유통한 물량으로, 이러한 악성 판매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크비전 이인섭 대표는 “이커머스를 통한 글로벌 제품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각국의 위조상품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공적인 글로벌 브랜드 안착을 위해 국가별, 제품별 위조상품 유통 현황과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위조상품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마크비전은 ‘랄프로렌코리아’, ‘라코스테’, ‘젠틀몬스터’ 등 다수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아크메드라비(ADLV)’와 글로벌 브랜드보호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